

#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송언석 등 1심 벌금형... 의원직은 유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에 나온 선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관 부장 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0만원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전 총리에게는 각각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 현직 국회의원의 이만희·김정재·윤환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 1150만원, 550만원이 선고됐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 1500만원을, 원외인사인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1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저항권 행사 등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의사건 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벌금 2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 사건 6년 7개월, 기소 5년 10개월만에 1심 마무리

### 나경원 벌금 2400만원·송언석 벌금 1150만원 등 법 “국회 정상 운영 방해... 행사 위력 중하지 않아”

다만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진다”며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

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서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면서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현직 국민의힘 의원 중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 이상을 구형한 바 있다.

/뉴시스



## 나주시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개최

###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 예고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8일 제6차 본회의까지 29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제275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6차에 걸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4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나주시의회는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업무 추진 실적 및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이후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강정·조영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각각 ‘공공체육시설의 복지 연계’를 통한

사회적 고립 해소방안’과 ‘전태일 정신과 나주의 미래 노동’이란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자리에 선 우리는 지금, ‘유종의 미’라는 말의 무게를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제9대 나주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또한 1조 600억 원의 2026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언급하며 “지난 4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단 1원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자, 시민의 세금이 가장 절실하고 가치 있는 곳에 투입되는지, 철저한 검증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시민께서 맡겨주신 숭고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자세로 회의에 임하겠다”고 말하며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를 선언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 장 보고 와서 “초과근무”... ‘수당 루팡’ 공무원들, 5배 토해낸다

### 행안부, 지자체 대상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 공개 시간의 근무시간 허위 입력 및 수당 부당수령 가장 많아 아이 등하원·부모님 병원 동행 등... 중징계에 환수가산 실제 근무 안하고 대리 입력만 51회... 동료도 징계 처분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수당을 부당 수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이들은 출근시간 입력 후 또는 퇴근시간 입력 전 아이 등·하원, 부모님 병원 동행, 개인 운동 등 사적 용무를 보거나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동료에게 대리 입력을 부탁하기도 했다.

20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일

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시간 허위 입력 및 수당 부당 수령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감찰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위반 등 공직사회 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익명신고, 제보, 언론 보도 등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총 14건, 32명의 위법·부당 사

항이 적발됐다. 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사항은 시간 외 근무시간 허위 입력 및 수당 부당 수령이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 성동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6급 공무원) A씨는 시간 외 근무시간에 청사 외부에서 사적 용무 후 복귀해 퇴근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29차례(휴일 18건, 평일 11건)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구체적으로 평일에는 오전 8시 이전 출근해 시간 외 근무시간 입력 후 바로 나가 자녀 등원 등 사적 용무를 보고 출근시간 전 복귀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자녀 하원 등 용무를 본 뒤 퇴근시간 입력 후 바로 퇴근했다.

이런 식으로 A씨가 허위로 입력한 시간 외 근무시간은 총 86시간으로, A씨는 이를 통해 110만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

하게 챙겼다. 같은 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7급 공무원) B씨도 평일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청사를 나가 부모님과 함께 장을 보거나 집안일 등 사적 용무를 본 뒤 청사로 복귀해 퇴근시간을 입력했다.

휴일에는 청사에 출근해 출근시간 입력 후 부모님 병원 방문에 동행한 뒤 퇴근시간을 입력했다. B씨 역시 29차례(휴일 10건, 평일 19건)에 걸쳐 시간 외 근무시간 총 98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10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A씨는 맞벌이 부모로서 자녀 등·하원 및 돌봄을 해야 하는 점, B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홀로 모시고 있는 점 등 불가피한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적 용무 후 그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 광주 통합돌봄 조례 전면 손질...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미정(민주당·동구2) 광주시의원의 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통합돌봄 지원조례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시행령을 앞두고 전면 개정된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0일 정례회 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광주 돌봄 통합돌봄’ 체계를 국가 표준모델에 맞춰 정비하고, 지역돌봄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서울·부산 등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선도시례로 평가받았다.

이번 전면 개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상위법과 용어·체계를 맞추고,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으로 통합돌봄 범위를 확대하며 전달 체계와 협의체 구성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명은 ‘통합돌봄 지원조례’에서 ‘돌봄 통합지원 조례’로 바뀌고, 연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사회보장·보건의료 계획과 연계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통합지원 전문인력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위원회를 돌봄 통합지원협의체로 개편하고 위원수도 15명에서 25명으로 늘려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상위법의 원칙인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조례 목적에 반영해 지역맞춤형 돌봄 철학을 강화했다.

/김병남 기자

2025 장성군 방문의 해

천년고찰 백양사(쌍계루)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

장성군 Jangseong